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2021.10 | Vol.10

미리보는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동물자유연대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동물자유연대 이슈리포트 2021.10 Vol.10

미리보는 '22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

---

0. 들어가며

지난 9월 3일 2022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 수준입니다. 정부예산안에는 내년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가 담겨 있는 만큼 천문학적 규모이며, 교육, 복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예산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국가와 지자체(시·도)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동물복지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합니다.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이를 시행할 인력과 예산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정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있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경 쓰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향방을 점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예산안 중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1. 조사 목적 : 동물보호/복지 예산의 편성 현황 및 적절성 평가

2. 조사 범위

- 대상 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 예산 성격 :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예산
- 동물의 범위 :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등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관리되는 (이를 목적으로 포획, 수입, 판매 되는 야생동물 포함) 동물

1. 국회로 간 정부예산안

A. 정부예산 편성 과정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정부예산편성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2022년도 예산안의 경우 2020년 12월31일까지) 향후 재정운용 여건, 중기 재정정책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담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중앙관서에 통보합니다.

2)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기사업계획을 1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3)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재부는 각 중앙관서가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을 토대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과 차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이 담긴 예산안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관서에 3월 말까지 통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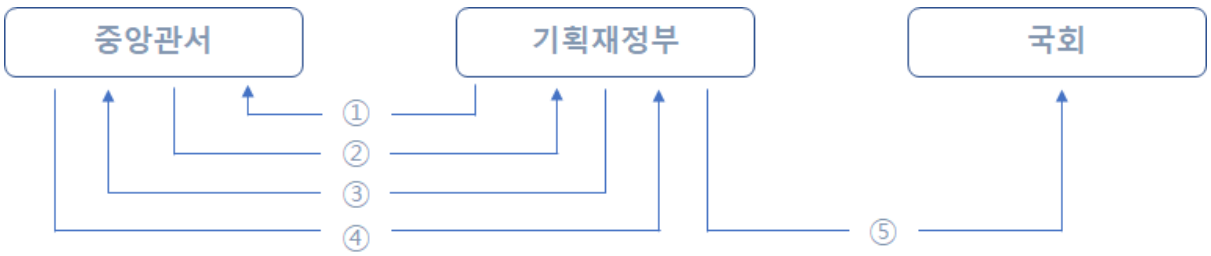
4)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요구하는 예산요구서를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5)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작업을 예산안 편성을 거치는데 통상 총지출 규모 설정과 총지출 규모의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단계를 거칩니다. 두 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안 시안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중간보고, 당정협의, 예산자문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 예산안을 마련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림 1] 정부예산안 편성과정



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②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③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④ 예산요구서 제출 ⑤ 예산안 편성 및 국회제출

B.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1) 회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업무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의 경우 국회 농해수위에서, 환경부 예산안은 환노위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2)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예비심사

각 상임위는 예산안이 회부되면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 – 찬반토론 – 의결의 순서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지는 않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등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예결위 종합심사

상임위의 예비심사 후 예산안은 예결위에 회부되어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사실상 예산안은 이때 거의 확정이 됩니다.

4) 본회의 심의·의결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때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정부 이송 및 공고

이렇게 국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친 예산안은 다시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하는데 다만 대통령의 공고가 아니더라도 헌법 제54조제2항에 의거 '국회의결'로 예산안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C. 예산안 처리 현황

2022년도 예산안은 10월25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2022 동물보호·복지 예산 편성현황

A. 예산증감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증감(C)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C/A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및복지대책	5,277	5,277	14,935	11,020	5,743	108.8
	동물복지축산 인증제활성화	1,095	1,095	1,427	1,095	-	-
	반려동물전주기 산업화기술개발(R&D)	-	-	7,680	6,422	6,422	순증
	반려동물인프라구축	3,526	3,526	4,693	4,693	1,167	33.1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야생동물식물 보호기반구축[2]	280	280	-	780	500	178.6
	야생동물 밀렵거래 방지	1,478	1,478	-	1,489	11	0.7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2] 해당 예산 중 '사육곰 관리개선' 항목에 한함.

[1]	동물원관리 및 동물복지 제고	300	300	-	200	-100	-33.3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1,285	1,285	-	535	-750	-58.4

정부예산안 중 농림부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동물복지축산 인증제활성화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기술개발(R&D)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사업예산, 환경부의 △야생동물식물 보호 및 관리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중 일부사업의 예산을 동물보호·복지 예산으로 분류해보면 해당 사업들의 예산은 2021년 132억4100만원에서 2022년 262억3400만원으로 129억9300만원(98.1%) 증가했습니다.

농림부의 예산 증가폭이 큰데 2021년 98억9800만원에서 2022년에는 232억3000만원으로 133억3200만원으로 1.3배가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및복지대책 예산이 57억4300만원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전주기 산업화기술개발(R&D)은 올해 신설해 64억2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환경부의 예산은 33억4300만원에서 30억400만원으로 10%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예산 중 지난해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되었던 기자재 마련 등에 소요됐던 예산이 올해 빠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B.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2021(21.7월말)						2022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동물보호및복지대책	**5,277**	**5,277**	**5,277**	**5,277**	**-**	**-**	**11,020**
. 교육·홍보	2,225	2,225	2,225	2,225	-	-	2,111
. 유실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1,312	1,312	1,312	1,312	-	-	1,589
.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1,140	1,140	1,140	1,140	-	-	3,420

[1] 환경부 예산은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사업의 세부사업으로 2022년도 요구안 확인 불가.

. 동물보호·복지실태조사정례화	600	600	600	600	-	-	600
. 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	-	-	-	-	-	1,500
. 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	-	-	-	-	-	-	720
. 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융자)	-	-	-	-	-	-	1,080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95**	**1,095**	**1,095**	**454 (310)**	**-**	**-**	**1,095**
.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095**	**1,095**	**1,095**	**454 (310)**	-	-	**1,095**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	-	-	-	-	-	**6,422**
. 반려동물 먹거리수입대체 및 국산화	-	-	-	-	-	-	842
. 반려동물 맞춤형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	-	-	-	-	-	5,580
○반려동물인프라구축	**3,526**	**3,526**	**3,526**	**3,526 (304)**	**-**	**-**	**4,693**
. 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	3,526	3,526	3,526	3,526 (304)	-	-	**4,693**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사육곰 관리개선 한정)	280	280	280	-	-	-	780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1,478	1,478	1,506	737	-	-	1,489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동물원관리 및 동물복지 제고	300	300	300	- [-]	-	-	200
.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1,285	1,285	1,285	679 [679]	-	-	535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및복지대책'의 경우 TNR사업의 확산으로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 예산이 34억20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고, 증가하는 유실·유기 동물 대책으로 '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 예산 15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과 맞물려 '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지원(융자)' 예산도 각각 7억2000만원과 10억8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역시 신설된 예산으로 '반려동물 먹거리수입대체 및 국산화'에 8억4200만원, '반려동물 맞춤형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에 55억8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직영 전환을 돕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11억6700만원 증가한 46억9300만원입니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예산 중 사육곰 관리개선 예산은 올해 설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한 2억8000만원에서 2022년에는 부지기반조성에 필요한 7억5천만원을 포함 7억8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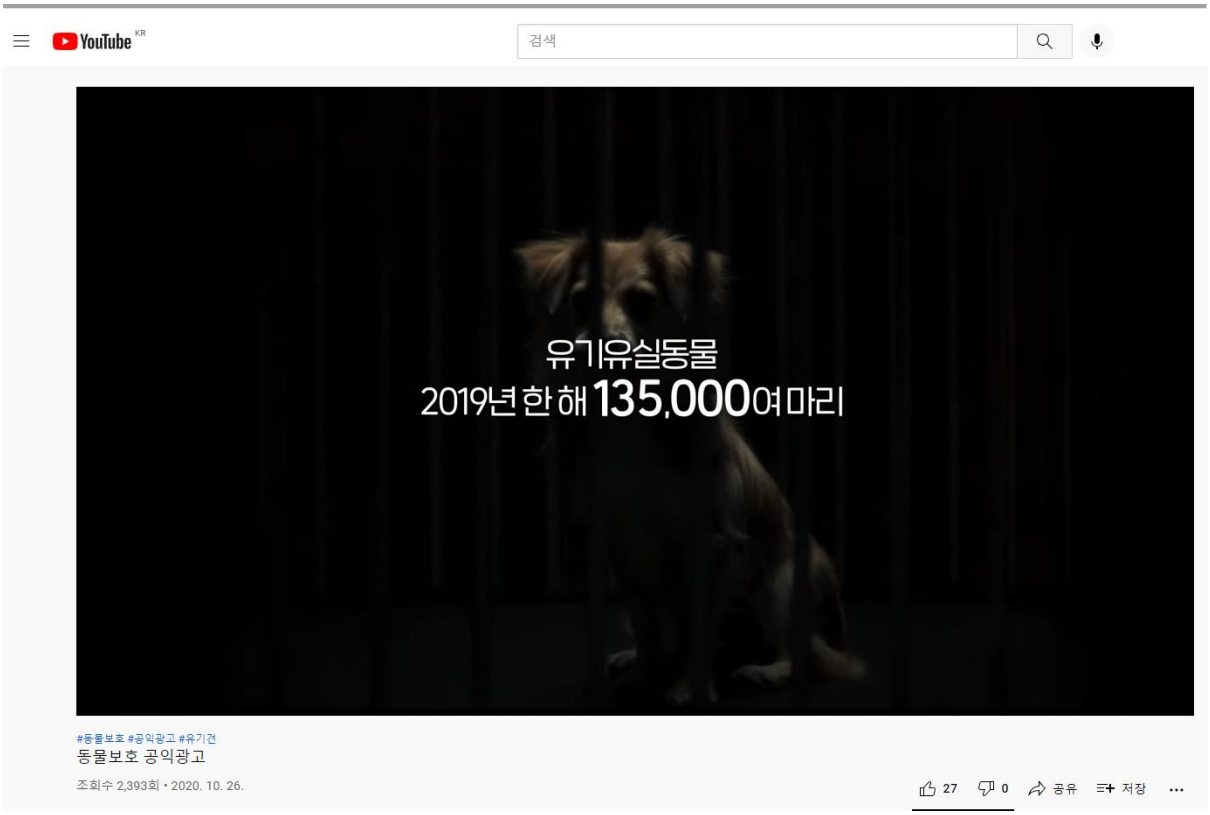
3. 사업별 내용

A.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

1)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홍보

동물보호 및 복지 교육·홍보에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책 확산 확보' 항목으로 TV 공익광고를 제작해 송출 및 지자체 협력 홍보 캠페인, SNS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동물보호 공익광고 영상]



이와 함께 '교육이수 의무자 교육 등'에는 교육 이수 의무자인 맹견소유자와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미용업 등의 동물영업자 대상 교육 컨텐츠를 강화하고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일반시민 대상의 동물보호 교육포털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또 동물보호복지, 소유자 준수사항, 영업 관련 상담 및 온라인 불법 모니터링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인력을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문의 및 상담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상담인원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이어져 실행에 제약이 있지만 희망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문화축제'를 열수 있도록 1억원의 예산도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홍보예산]

구분		예산(백만원)		
		2021년	2022년	증감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책 확산 확보	TV 공익광고 제작(1편/1분)	840	100	120
	지상파 송출(1개월)		860	
	지자체 협력 홍보 캠페인(연 3회)	100	150	50
	이슈관리 언론홍보, SNS홍보	300	240	△60
	소계	1,230	1,350	110
교육이수 의무자 교육 등	영업자/동물보호명예감시원 온라인 교육콘텐츠 강화	45	20	△25
	초등학교 대상 동물보호교육	295	221	△74
	대국민 대상 동물보호 교육포털 유지보수 등 운영	400	150	△250
	소계	740	391	△349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운영(인건비 4인) 및 회선 사용료 등		115	230	115
동물보호문화축제(1개소)		100	100	-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등		400	400	-
합계		2,225	2,111	△124

2) 유실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해당 예산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지원과 △동물보호센터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구조보호비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입양비지원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마리당 평균 25만원을 책정 이중 30%를 정부가 제공합니다. 지원 항목은 올해 기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입니다. 구조보호비지원은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4만 마리에 대하여 마리당 2.1만원(단가7만원의 30%)으로 산출하여 8억4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3)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갈등 완화 및 공중위해방지 등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방사 비용 지원예산입니다. 지원규모를 올해 3만8천마리에서 내년에는 5만5500마리로 늘리면서 예산역시 13억1200만원에서 34억2천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몇년간 변동이 없던 지원단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의 인상입니다. 지원단가의 인상으로 TNR에 보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해 마구잡이식 포획과 수술 등 그동안 지적되었던 사업의 문제점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사비는 '21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매년 동물보호복지 이슈관련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1억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실태조사(1억원), 반려동물이력제도입(2억원), 길고양이 분포도 조사(2억원)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구조동물(개)중 72% 잡종견으로 읍면지역 실외사육환경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출산 반복으로 이는 유기동물수의 증가로 이어져 동물보호센터내 보호수준 저하로 부정적인 주민 인식 및 사회적 부담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유기동물 증가의 원천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22년 신규 반영된 예산입니다.

농림부는 '20년기준 구조보호동물 130,401마리중 개가 95,261(73%)마리로, 이중 잡종견이 68,313(72%)마리를 차지, 잡종견은 입양되지 않아 안락사 등으로 부정적 인

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발생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도시지역의 어린 비품종견의 발생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실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위 '마당개'에 대한 중성화 수술 사업을 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30일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유기 반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율 대폭 제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이와 궤를 같이 하는데 중성화수술에 필요한 비용 40만원(수술비 35만원(대형견 기준) + 동물등록(내장형), 차량운행 등 경비 5만원) 중 20%(나머지 70%는 지방비, 10% 자부담으로 충당)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전체 사업대상은 37.8만마리로 추정(읍면지역37.3만마리+사설보호소0.54만마리)되며[3], '21년에는 18,750마리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집행절차]

농식품부		**지자체**		**동물소유자**		**공모사업자** (단체,병원)
사업지침 및 사업량 배정	⇒	중성화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자체에 중성화 수술 신청	⇒	현장 방문 또는 차량 운송 지원
실적제출	⇐	수술/동물등록여부 확인·집행	⇐	동물 인계	⇐	중성화수술/ 동물등록시행

[3] ① 전체가구수 2,148만가구('20기준)중 읍면지역 415만가구(19.3%,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약 149만마리(읍면지역 28.5%가 평균1.26마리 사육, '20 국민의식조사, 농식품부) 사육, 이중 암컷 74.5만리(50%)중 노령견 등을 제외한 참여율 50% 반영시 37.3만마리가 사업대상

- 37.3만마리= 415만가구(읍면지역)×28.5%(읍면지역반려가구수)×1.26마리(읍면지역 평균사육마리수)×50%(암컷)×50%(참여율, 노령견 등 제외)

② 사설동물보호소 총 보호두수 18천마리(82개소) 중 중성화 미실시한 암컷 5,400마리 대상*

그리고 '26년까지 5개년간 중성화사업대상(37.5만마리)에 대해 연간 7만5천마리씩(60억)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중성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2년 예산안에는 18,750마리(15억원)만 반영되어 있어 향후 4년간 사업이 목표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체사업대상의 중성화율은 85% 정도로 예상됩니다.[4]

6)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2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부는 2019년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결과' 전국 82개소의 사설동물보호소 중 대부분이 시설·환경 열악, 입지여건 등 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하여 충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1년에는 18억원을 투입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15개소에 대해 개소당 2억4천만원 이내에서 바닥공사, 환기시설, 소음악취방지시설, 냉난방시설, 격리실, 견사 시설설치 등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됩니

[4] 농림부가 발표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도 목표치를 85%로 제시

다.(국비20%, 지방비30%, 자부담20%, 융자30%)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향후계획]

예산액	'21	'22	'23	'24	'25	'26
(사업량)	-	18억원 (15개소)	24 (20개소)	24 (20개소)	24 (20개소)	24 (20개소)

B.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해당 사업의 목적은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확대를 위해 신청 농가의 인증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집을 배포하며, 소비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물의 안내 및 전시를 지원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교육방법 다양화 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인증 희망농가에게 축종별 인증가이드라인을 제작·제공하며, 인증 및 사후관리 담당 부서에 심사장비구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세부사업별 내용]

구분	내용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 동물복지축산 신규인증 신청 희망농가 대상,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운영에 따른 환경개선/경영에 관한 컨설팅 비용 40% 지원
정기교육 체계 확립	- 동물복지축산농장 정기교육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년중 상시 운영하여 축종별 지역별 교육기회 확대 제공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집합교육외에 온라인 교육기회 제공
인증 가이드라인 제작	인증신청 간편화를 위한 신청가이드북 지원
동물복지인증제 안내 및 인증생산품 판로 지원	- 전국 245개 지자체에 동물복지관련 규정집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동물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력 제고 - 동물복지축산인증 생산품의 판매처 확대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판로 지원 및 안내 강화 - 대국민 동물복지 인식개선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인증제와 인증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수요확대 지원

인증심사 장비 확보	- 인증 및 사후관리시 필요한 가스계측기 등 심사장비를 구입하여 지역본부, 사무소를 포함한 10개부서의 현장심사에 활용

C.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R&D)

1)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해당 사업은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특수목적의 처방식 사료(첨가제), 보충제 등 제형화·고품질화와 천연물 등을 활용하여 사람이 먹는 식품 수준의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유형별 맞춤형 반려동물 먹거리 제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2)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질병진단·치료제, 의료서비스 등 반려동물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과제사업으로 반려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COVID-19 등) 신속·다중진단키트 개발, 반려동물 임상진단 관련 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항생제, 항암치료제, 기타의약품 등), 혈액 대체제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역사업별 부·청 주요 연구내용]

내역사업	부처	주요 내용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농식품부	- 반려동물 질환 맞춤형 특수목적의 처방식 사료 개발 - 반려동물 사료 첨가제 및 보충제 개발
	농진청	- 반려동물 기초 영양대사 특성 구명 및 탐색 - 기능성소재 효능평가, 사료화 및 가공기술 개발 - 사료 주원료, 기능성원료 국산화 기술개발
반려동물 건강 및 복지증진 기술개발	농진청	- 반려동물 신체나이 및 건강지표 계량화 연구 - 유전정보/행동특성 활용 반려동물 건강관리기술 개발 - 세포기반 반려동물 건강개선 및 질병진단 기술 개발 - 우수 토종견의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체계 구축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농식품부	- 반려동물 질병 유형별 맞춤형 치료제 개발 - 동물의료용 기구·기계, 동물의료용품 및 동물전용 의료기기, 질병(신·변종) 신속진단키트 개발 등

D. 반려동물인프라구축

위탁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 및 관리부실 등의 문제점 노출 등으로 인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전환요구 확대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에는 신규 11개소를 포함 16개소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인 5개소(광역 1, 일반 4)에는 22억4천만원이 신규 11개소(광역 1, 일반 10)에는 24억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직영·위탁 비교('20년 실태조사 기준)

구 분		지자체 직영, 시설위탁	민간 위탁
사업주체		지자체장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
시설수(개소)		52	228
규모(일시수용 가능마리수)		5,164(개소당 99.3)	20,682(개소당 90.7)
평균보호기간 (일) 구분이 어려워 단순 통계 산출		24 시군구별 총 보호일수/유기동물수	21 시군구별 총 보호일수/유기동물수
인력		평균 6.3명=329.6/52	평균 3.3=756.4/228
연간 운영예산		약 12,699백만원 * 개소당 244.2백만원	약 14,020백만원 * 개소당 61.5백만원
운영비 수급방안		지자체 예산	지자체별로 마리당 지원 또는 구조, 보호, 치료 등을 구분하여 지원
유실유기 동물현황 ('20) 130,401마리	계	46,687	83,714
	미포획	9	719
	인도	6,235	8,606
	분양·기증	14,248	25,857
	자연사	10,642	22,032

	안락사	10,180	1,6882
	방사	404	1,039
	기타(보호중)	4,969	8,579

E.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사육곰 관리개선)

환경부는 지난해 '21년도 예산으로 '몰수동물 보호시설 설계비'를 신청했습니다. 불법 증식된 개체를 몰수하여 수용하고 사육 포기된 사육곰을 보호, 불법증식 억제하기 위해 사육실, 의료시설, 야외 방사자 등을 갖춘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시설은 75마리의 불법증식 및 사육포기 사육곰을 수용가능합니다. 올해 설계비가 2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22년도 예산안에는 부지기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7억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2014-2016년 진행된 사육곰 증식금지사업 당시 확보한 사육곰 유전자 DB를 운영 관리 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3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F.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단속의 어려움 등이 있어 밀렵· 밀거래에 대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위한 밀렵· 밀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캠페인 등 홍보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야생동물의 포획금지 등 밀렵 밀거래 단속 및 밀렵감시 활동비 지원을 위해 환경청 밀렵 밀거래 단속 지원에 7억8900만원, 민간단체(법정협회) 등 밀렵감시 활동비 지원에 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G. 동물원관리 및 동물복지 제고

「동물원법」 제2조의2(동물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14조(비용지원), 시행령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관리지침 등 기준 마련을 위해 '동물 종별 사육관리 및 특별보호종 관리 지침 연구'를 추진합니다.

H.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6월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 신고제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원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하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본 예산은 개선방안 중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구축계획의 일환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5억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4. 예산안 평가

A.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 교육·홍보

교육·홍보예산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책확산 확보와 교육이수 의무자 교육, 동물보호복지상담센터 운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정책확산 확보로 13억5천만원입니다. 교육·홍보예산의 64%,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 예산의 12.3%를 차지합니다. 이중 TV광고제작과 지상파송출을 위한 예산은 9억6천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교육·홍보예산의 45.5%,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 예산의 8.7%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정부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비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8억4천만원입니다.

물론 동물보호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의 1/4이상이 자연사로 포장된 고통사를 당하는 현실에서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홍보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그 효과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예산으로 지난해 농림부가 제작한 동물보호 공익광고의 경우 유튜브 상 조회수는 2,409회이며, 재작년에 제작한 영상 역시 조회수가 4,947회에 불과합니다. 먼저 정책홍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 역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 동물 발생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컨텐츠와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강사풀, 이들을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올해 관련예산은 지난해 7억4천만원에서 3억4900만원 줄어든 3억9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교육포털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빠지는 등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박해보입니다. 향후에는 동물보호교육이 활성화되고 우리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을 위한 진흥원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소유자 준수사항, 영업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동물보호·복지 상

담센터의 경우 농림부에서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존재도 모르는 이들이 다수입니다. 동물관련 민원의 증가에 따라 인원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과제로 보입니다.

2) 유실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정부가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기 위한 입양비 지원과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구조보호비지원입니다. 입양비 지원과 구조보호비지원 예산은 7억4900만원과 8억40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입양이 활성화 된다면 동물보호센터 내 체류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입양비 지원이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유기동물 입양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37.8%가 '없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꼽은 이유는 '질병, 문제행동이 있을 것 같아서', '연령', '입양방법 및 절차를 잘 몰라서'로 나타났습니다. 금전적 지원이 없어서라기보다 입양을 했는데 해당 동물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잔여수명이 짧을 것 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 해 동물보호센터의 여건을 개선하기 보다 동물보호센터의 여건 개선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보호비지원 예산은 지나치게 인색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구조보호비 지원예산으로 예상되는 유실유기동물(13만3333마리)의 30%인 4만 마리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7만원)의 30%인 8억4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마리당 구조보호

비가 7만원에 불과한데 여기에는 포획과 사료, 관리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왜 동물보호가 '수용소'의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구조보호비를 현실화하고 최소한의 고통경감조치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산정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3)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2020년 동물자유연대가 전국의 TNR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7개 지자체 중 TNR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19개에 불과했습니다. TNR은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적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지난해 11억4000만원에서 올해 34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당연한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예산이 큰폭의 증가를 보인 것은 먼저 TNR 개체수를 2021년 38,000마리에서 85,500마리로 두 배 넘는 수준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기준단가 역시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1/3 늘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TNR은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불신을 초래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부도덕한 사업수행자의 탓도 있겠지만 비현실적인 비용산정으로 사업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자를 찾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리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현실화해 경쟁을 유도하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TNR 시행과 기준단가 인상이 반영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합니다.

4)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그동안의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과정에 있어 과학적, 사실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확한 현실과 실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되고 시행되는 정책들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내년부터는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들을 배정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1억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실태조사(1억원), 반려동물이력제도입(2억원), 길고양이 분포도 조사(2억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불법생산판매업 근절을 위해 동물이 태어날 때부터 관리를 하는 반려동물이력제도입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수차례의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음에도 기본적인 '영업자준수사항' 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생산판매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만큼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합니다.

위 내용 외에도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이번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정부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입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의 유실유기동물 정책은 사후관리에만 급급했습니다. 2019년 정부와 지자체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등에 투입한 예산은 232억원으로 이는 직전 해인 2018년에 비해 15.8%, 2015년에 비해서는 대략 9배 증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실유기동물 발생은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해왔습니다. 동시에 동물보호센터 입소동물 중 절반이 죽어나가는 참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줄

이는 노력보다는 거리로 나온 동물의 처리방법에만 골몰한 결과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발생현황' 분석보고서를 통해 유실유기동물 발생원인에 대해 여러 요인을 분석했고, 방치된 '마당개'들의 무분별한 번식과 관리소홀로 인한 유실 등이 증가의 큰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예산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9월30일 발표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도 예방단계에서는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70%로 높이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은 2026년까지 8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유실유기견 정책을 사후관리에서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다만 이미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제주도의 경우에도 시행 3년 정도가 지나서야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수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6)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유실유기동물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치료를 일반시민 및 민간단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는 몇몇의 시민들이 커뮤니티 형태로 모여 활동을 시작한 곳들이 많아 법인이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를 갖춘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의 경우 동물보호 최일선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대신해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원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보호하거나 혹은 후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도 민간동물보호소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역시 민간보호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지원을 통해 제도권내 편입 유도라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책임을 민간보호시설이 분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은 오래전부터 요구되어 왔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2019년 진행한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설이 입지 여건 등에 있어 타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란 법률 등)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난 9월 30일 발표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시설운영을 허용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을 통해 해당 보호소들이 신고제 기준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안의 향후계획을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95개소를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제 도입을 서두른다면 환경개선지원이 늦어지는 민간보호소의 경우 제도권내 편입이 어려우며, 입지적 문제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사업 후에는 신고제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재정적 여건

을 갖춘 곳이 아니면 민간보호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제 도입과정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B. 동물복지 축산인증제 활성화

해당 사업의 내용은 동물복지축산인증농장 확대를 위한 신청 농가의 인증컨설팅 비용 지원, 지자체 담당자 대상 관련 규정집을 배포, 소비자(국민) 대상 동물복지 축산물 안내 및 전시 지원, 교육방법 다양화를 통한 축산농가 대상 교육기회 확대, 인증 희망농가 축종별 인증가이드라인 제작·제공, 인증 및 사후관리 담당 부서의 심사장비구입 지원 등입니다.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는 가축으로서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동물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동물복지축산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동물의 고통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으나 적어도 공장식 축산 환경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고통을 경감할 수 있으며, 그 특성상 일반적인 축산방법으로 자리잡는다면 장기적으로 이용되는 동물의 수 역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 관련 법개정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은 342개소(산란계 174, 육계 127, 양돈 17, 젖소 23,한우 1)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물복지인증제도 활성화와 함께 일반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동물복지기준이 마련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농장동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 산업에 있어서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의 추구는 글로벌적인 추세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수평아리의 학살을 막기 위해, 달걀 상태에서 암수 판단을 하여 병아리로 태어나기 전 폐기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활성화를

통한 인간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진정한 동물 복지, 즉 불필요한 동물의 고통 경감을 위해 근본적인 관점 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 전환을 위한 기술적 근거, 즉 산업 전환의 기반을 닦으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C.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

1)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펫코노미의 규모 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웰빙 먹거리'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반려동물 사료의 수입 의존도는 약 65% 수준으로 이를 국산화 하려는 노력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먹거리 만큼이나 반려동물 질환, 상해 등에 따라 반려동물 의료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 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인해 당뇨, 고혈압, 관절 질환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늘면서 진료·치료과목 증가 등 질적 서비스 다변화도 요구되고 있어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D.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농림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이며, 이중 민간위탁은 228개소, 지자체 직영 47개소, 시설위탁은 5개소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체 동물보호소의 대다수인 81.4%를 민간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자의 의지에 따라 보호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헌신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개농장주가 수탁을 받거나 축사의 한 켠을 이용해 운영하는 등 부적절한 시설과 관리 문제를 노출해왔습니다.

농림부도 직영· 시설위탁이 지자체의 동물보호정책 추진의지 반영으로 위탁에 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 유기동물의 보호수준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위탁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설에서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아 구조·보호·치료·안락사의 비용을 충당해 시설이 대부분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영· 시설위탁은 입소부터 체계적인 질병관리와 보다 나은 보호 환경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해 전반적으로 위탁보다 입양률이 높고, 자연사 등의 비율이 낮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자체 여건이 허락한다면 가급적 동물보호센터를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며 실행을 위한 예산지원이 절실합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고 이후 운영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내 유실유기발생건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충분히 않은 지역의 경우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발생건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개별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거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비용을 유실유기동물 발생예방 및 보호수준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 야생동식물 보호기반 구축(사육곰 관리개선)

올해 6월 기준 국내에는 379마리의 사육곰이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6

년까지 증식금지 사업을 벌여 900여 마리의 곰에 대한 중성화를 완료, 이후로는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증식금지사업에서는 중성화 수술만 진행했을 뿐 정부의 매입 및 보호는 고사하고 사육환경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1980년대 사육곰산업을 장려했던 원죄에 비해서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그사이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참담한 곰 사육실태를 알리고 2020년에는 사육곰 이주계획 발표와 경기 용인 소재 농장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육곰 생츄어리로 해당 예산확보를 위해 주무관청인 환경부를 비롯해 정부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2021년도 예산안에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올해 설계작업 중입니다.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도 사육곰 관리개선 항목 중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예산으로 7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육곰들이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고, 빠르게 개체수가 줄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10월2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장관은 당초 2024년 목표이던 생추어리 완공을 202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환노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증액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증식금지 사업 당시 진행되었던 '사육곰 유전자 DB구축 사업'의 후속사업인 '사육곰 유전자 분석 및 개체관리 DB운영' 항목으로 매년 3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증식금지사업 당시 확보한 DNA와 용도변경을 통한 사육곰 도축 및 폐사하는 곰들의 DNA를 비교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DNA 체취를 관할 지방환경청 혹은 사업수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장주가 털을 뽑아 보내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서 실제 해당 사체에서 체취하는 지 확인이 불가하

며, 동물자유연대가 사육곰 미국 생츄어리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와 실제 남아 있는 곰이 일치 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개체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그 원인을 파악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F.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예산의 경우 유역·지방 환경청 밀렵 밀거래 단속 지원 7억8900만원, 법정협회인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의 밀렵감시 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7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출근거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향후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G.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지난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과 20세기 이후 신종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중 72%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야생동물 수입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야생동물 종합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수입신고제 추가 도입 등을 통해 감염병 유입원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의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강화 예산 역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해외유입 야생동물은 53만 마리이며, 이중 37%인 20만 마리 정도만 수입허가에 따른 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생동물의 해외유입은 감염병 확산 우려도 문제지만 수입되는 동물의 복지와도 직결

됩니다. 기존 허가대상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유통되고 이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야생동물 까페와 같은 전시·체험시설의 경우 어디에서 동물들을 데려오는지 또 동물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허가대상이 아닌 해외유입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은 신고제 운영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5억350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7억5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시스템 구축비용 등이 빠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